

광주디자인센터 프로젝트비는 눈먼 돈?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원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프로젝트 비용 수천만원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연구수당이나 수익사업 유지보수금을 잘못 지급하고 신규 채용 임용자격 기준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등 디자인센터의 부적절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디자인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을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조치를 내리고 7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원장 부인 사업체에 수천만원 지원했다가 회수 시 종합감사 결과 12건 적발...기관장 경고까지

이번 감사 결과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지역 우수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화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수의 계약을 통해 원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A사에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원장이 취임 전에 대표로 있었던 곳이다.

디자인센터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임직원이 2년 이내에 제작했거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직무 회피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디자인센터가 준용하

고 있는 지방계약법에는 기관장의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담당부서가 이를 문제 삼자, 디자인센터는 뒤늦게 4000만원을 회수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원장에 대해 기관장경고, 디자인센터에는 기관장경고, 담당 팀장에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또 지난 2015

년 6월 연구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 운영 성과나 사업기여도가 없는 원장과 과장 등 3명에게 연구수당 57만여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센터는 수익사업 유지보수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규정 상 지급대상이 아닌 광주 3개 구청 직원에게 190여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 수입을 회계사업으로 분류해 380여만원의 보상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지방보조사업 업무나 신규 채용 임용자격 기준 적용, 가진 기업 공동브랜드개발 용역 추진 절차, 공무 국외출장 전결처리 등에서도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봉우 기자

발작물에 보복성 농약살포 동네조폭 구속

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동네주민들의 발작물에 농약을 뿌리는 등 수년동안 마을 주민을 괴롭힌 50대 동네조폭이 구속됐다.

무안경찰서는 6일 발작물에 농약을 살포하고 불건을 훔친 혐의(절도·재물손괴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정모(60)씨 등 9명의 양과발 등에 수십차례에 걸쳐 분무기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하고 양과 등을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0년께 고항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이 저조할 경우 다른 사람의 발작물을 훔쳐 자신의 밭에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작인에게 적발이 돼 훈계를 받으면 보복하기 위해 밭시간을 노려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 2014년께 한차례 적발됐지만 "농약의 성분이 검출이 안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김씨의 행동이 반복되자 밭에 CCTV까지 설치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112허위신고·경찰관 폭행 30대 조폭 구속

광주지검은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지복(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112에 '광주 북구 한 노래홀 외국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있다'며 허위신고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앞서 36번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역 조폭조직에 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춘정 기자

음주측정 거부 40대 상습 음주운전자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에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서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변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측정에 불응한 점 등으로 미뤄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측정불응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형택 기자

보이스피싱 혐의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은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4분께 광주 동구 한 주택 작은방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오는 13일 1심 재판에 출석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의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책상에는 판사에게 전하는 반성문이 놓여 있었다.

반성문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환장을 받은 뒤 피로워했다"는 가족의 진술로 미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

"檢 해수부 수사 능력"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산 해양수산부(해수부)에 대한 검찰의 능장 수사를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 의약속국인연대(4·16연대), 4·16 국민조사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검찰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조사 대상 공무원의 다수가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해 1월 해수부 김영석 전 장관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특조위인 이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진원·석동현 위원을 세월호특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뒤이어 같은 혐의로 연영진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현 해양과학기술원진흥원장) 등 2명도 고발했다.

같은해 2월에는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도록 보수단체 대표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특조위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된 해수부 3급 공무원도 고발했다.

뉴스



더위를 피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를 벌마당 도서관에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책을 보고 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대학 졸업 후 경력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전문계 교원의 호봉 확정시 관련 경력을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 규정은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력에 대학을 졸업한 후의 경력이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기계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학교에 입학·졸업 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하면 산업체 근무 경력이 대졸 이후 경력 아니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단순히 대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학력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조인호 기자

여친 살해 뒤 시신유기 50대 항소심 중형

광주고등법원 판사(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송모(53)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주춘정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 행유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서울특별시 건강관리사업(서울시건강증진사업) 2015. 1월 발표

42%p 감소 (건강검진 받은 사람 vs 받지 않은 사람)

18%p 감소 (건강검진 받은 사람 vs 받지 않은 사람)

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